

91.2.7

지방의회 겨냥 '범여성모임' 발족

이태영씨등 1백명 참여...12일 발기인대회 “서울시에 1~2명 후보내 적극 도울 계획”

여성의 지방의회 진출을 목표로 국내 최초로 전 여성계가 연대하는 '정치참여를 위한 범여성모임'이 발족된다.

12일 오후 2시 여성개발원에서 발기인대회를 가질 범여성모임에는 여성계 원로 이태영(가정법률상담소 소장)씨를 비롯 이계경(여성신문사 대표), 한명숙(여성민우회 회장), 신낙균(여성유권자연맹 대표), 김금래(여성단체협의회 사무총장), 이정자(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 총무), 김현자(전 국회의원), 손봉숙(여성정치연구소 소장), 황산성(변호사), 김숙자(명지대 교수), 장도송(조흥은행 연수원 원장)씨 등 대학교수·여성단체대표와 실무자·전 국회의원·전문직 여성·주부 등 각 계 각층 여성 1백여명이 발기인으로 참여한다. 발기준비위원 손봉숙, 이계경, 이정자씨 등은 5일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1선거구에서 1명을 뽑는 소선거구제와 돈많은 사람이 당선되는 선거풍토 때문에 여성들이 선풍 후보로 나서려 하지 않는 게 현실”이라

면서 “자칫하면 ‘여성없는 지방의회’가 구성될 우려가 높아 전 여성계가 연대하는 범여성모임을 결성, 서울시 의회(광역자치단체)에 무소속으로 여성후보 1~2명을 내 적극 도울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자체 선거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범여성모임을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힌 이들은 발기인대회 뒤 후원회원 확보, 후보물색 및 선거전략교육, 선거비용 공개모금을 통해 여성의 힘으로 여성의원을 당선시키고, 선거 뒤엔 선거비용을 공개해 “깨끗한 선거의 모범을 보이겠다”고 말했다.

광화문 필운빌딩 4층에 임시사무실(720-9190)을 개설한 범여성모임 준비위원회는 여성의 힘을 모아 여성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3월말까지 후원회원 1인당 1천원 이상씩 모금할 계획이다. 그러나 공개기금모금이 현행 선거법에 저촉되고, 소선거구제가 여성의 지방의회 진출에 큰 걸림돌이 되는 점 등을 지적, 범여성모임 발기준비위원회는 지난 4일 국회에 ‘지

방의회 선거법개정을 위한 청원서’를 제출했다.

준비위원회는 청원서에서 △광역 및 대도시 기초자치단체의 선거구는 중선거구제로 개정해줄 것 △국민이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선거운동 금지조항을 개정할 것 △합동연설회 개최, 선거벽보작성과 게시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선거공영제의 확대 실시 △



범여성모임 발기준비위원들은 5일 기자회견에서 이 모임을 미국의 전국여성정치위원회처럼 여성후원기구로 키워가겠다고 밝혔다.

시민기구나 사회단체가 공개적으로 선거자금을 모금해 특정후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근거 마련 △광역 3백만원, 기초 1백만원으로 기탁금을 하향조정해줄 것 등을 촉구했다.